



민주노총이 악의 축인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수많은 언론은 매일 민주노총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민주노총이 총궐기·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조직폭력배, 세금 도둑, 텀플스테이 등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한상균 위원장이 대역죄인인 것처럼 비난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의 봉쇄와 조계종의 압력 때문에 버티고 버티다 출두한 한상균 위원장은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껌데기였던 민주주의마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아무도, 어떤 언론도 말하지 않습니까?”라며 언론을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와 자본가들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대공장·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그들의 착취와 억압, 무능과 허약함을 가려왔다. 그런데 노동개약에 맞선 총파업은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다. 제대로 불붙는다면 수많은 미조직노동자들과 가난한 민중의 분노를 결집시킬 수 있고 정부와 자본가들의 책임전가와 위선을 단 번에 벗겨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언론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를 철저히 감추고 민주노총을 고립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올해 노동부가 ‘노동개약’ 광고에 쏟아 부은 광고비만 30억에 이른다. 교육부의 국정화 예비비 44억 중 22억도 광고비다.

미국 금리인상 임박! 경제는 더 깊은 위기의 수렁으로

일부 언론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자 긴급경제명령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발동되면 국회는 곧바로 이를 찬반에 부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사가 나오자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다. 하지만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긴급경제명령을 발동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긴급경제명령 발동이 아니라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당을 구원하듯 노동법 개약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연말에 일 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경제가 더 깊은 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16일쯤 미국 정부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금리인상은 한국 정부의 금리 인상을 부추길 수밖에 없고, 초저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연쇄도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속칭 ‘좀비 기업’이 전체 기업의 32%(2014년 기준)에 이른다. 수출은 10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급기야 10월엔 -15.8%를 기록했다.

노동자들의 생존이 아니라 오직 자기 이윤만 지키려는 자본가들의 경쟁은 더욱 격렬해진다. 자본가들은 그 격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자들을 더욱 무자비하게 쥐어짜고 더욱 무자비하게 해고할 것이다. 바로 자본가들의 핵무기

인 노동개약을 통해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동개약, 총파업으로 저지하자!

결국 경제위기의 대안에 따라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다. 자본가계급의 대안은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대안은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710조를 비롯해 자본가들이 빼앗아간 노동자의 피땀을 몰수해, 모든 재원을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노후를 위해 투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만 이루어내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진짜 대안은 조금도 수용하지 않는 정부가 가증스럽게도 노동법 개약이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이 대기업 정규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을 한다고 떠벌린다. 쉬운 해고,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임금 삭감을 통해 어떻게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

미래 노동자들의 삶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노동개약이 통과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잠자코 있다가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다 빼앗긴다. 12월 16일 총파업에 나서자. 12월 16일 총파업은 금속노조 중심의 파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총파업의 힘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수많은 노동자가 총파업 합류를 고민할 것이다. 총파업이 확대되면 필수품 정부는 손을 쓸 수가 없다. 공장과 사무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이 아닌가?

사무직 희망퇴직은 정리하고 수순 밟기 생산직, 사무직, 하청노동자가 뿔뿔 뭉쳐 싸우자

한국지엠이 사무직 희망퇴직을 작년 두 차례에 이어 또 밀어붙이고 있다. 14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희망퇴직 지원자를 받는다고 한다. 작년 2월에 300여명, 작년 말에 100여명을 쫓아냈는데 이번에 또 얼마나 쫓아내려나? 사무지회가 밝혔듯 사측은 노조와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강행하고 있다.

사측은 “글로벌 경기 여파, 국내 시장에서의 어려움, 수익성과 관련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올해 생산직 희망퇴직 이후 사무직...희망퇴직(을)...시행하기로 했다”고 사무직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여기서 잘 알 수 있듯, 사무직 희망퇴직은 단지 사무직만 노리는 것이 아니다. 세계경제위기,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지엠은 생산직 희망퇴직, 사무직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비정규직 대량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이후에 공장을 축소하면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수익성 운운하지만 미국 지엠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더 개선’됐고, ‘2014년 연간 판매량은 992만 대로 2013년에 이어 상승세’다.

세계를 누비며 더 싼 값으로 더 많이 노동자를 쥐어짜다 짜르며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사악한 사측에 맞서 모든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생활임금 쟁취를 내걸고 생산직, 사무직, 비정규직 모두 단결해서 싸우자. 16일 총파업에 지엠 노동자들도 적극 동참하고, 이번 주 부평공장에서 이뤄질 부평, 창원, 군산 비정규직 3지회 투쟁도 합차게 격려하며 함께하자.



쉬운 해고 칼 휘두르려는 정부에 ‘모든 해고 금지’ 로 맞서자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 5법 국회통과와 함께 쉬운 해고 지침 발표를 밀어붙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전문가답시고 어용학자들을 불러 모아 저성과자 해고 판례를 검토하며 쉬운 해고제 도입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20여명이 밀실에서 2,000만 해고살인 논의

폭력경찰이 토론회 장소를 감싼 채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의 출입을 가로막은 것만 보더라도 이 토론회가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지 알 수 있다. 밀실에서 20명도 안 되는 어용학자들이 2,000만 노동자 해고살인을 논의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민낯이다.

토론회에서 어용학자가 발표한 많은 저성과자 판례는 정말 어이없다. 근무 중 인터넷 게시판에 논평·칼럼을 올리거나, 인터넷 블로그에 회사 비리고발용 온라인 소셜을 연재한 것이 “저성과”이고 “해고 사유”라는 건 전형적인 자본가논리다.

자동차공장 라인 등 현장에서 작업 도중 짬짬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노조 게시판에 짧은 글을 올리거나 회사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동료에게 보내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은데 앞으로 이들 모두가 “저성과자”로 낙인 찍혀 해고당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인사발령에 불응해 업무를 거부한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 활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부당 발령을 내왔던가? 그리고 부당 발령을 거부했다고 얼마나 많이 해고해왔던가?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도 있다. 일거리가 없을 때 잠깐 눈을 붙이는 경우도 현장에서 자주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조차 ‘쉬운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쉬운 해고란 모든 노동자를 한 치 빈틈없이 죽도록 일만 하는 돈벌이 로봇으로 만들고, 어떤 저항도 못하게 만들며 사장 맘대로 언제든 썰 수 있는 자본가계급의 살인적 통제장치다. 이리니 쉬운 해고를 살인면허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모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노동해방 현장 건설하자

수년 동안 실적이 부진한 사람을 가만 놔두면 회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자본가들은 말할 것이다. 초등학교 6년 내내 꼴등을 했다고 학생을 퇴학시킬 것인가? 지겨운 공부를 강요하며, 성적을 기준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운 다음 다수 학생을 도태시키는 야만적 교육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윤 만능 논리로 실적을 강요하며 다수 노동자를 도태시키는 야만적 노동제도도 뒤집어엎어야 한다.

이윤이 아니라 사회의 필요를 위해 생산하는 노동자세상을 건설하면 현장에서 일할 맛이 절로 날 것이다. 거기에서는 모두가 자기 재능을 맘껏 꽃피우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위기의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쉬운 해고’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모든 해고 금지’, ‘일할 맛 나는 노동자세상, 노동해방 현장 건설’로 당당하게 나아가자.

